

두 노동자의 죽음이 던진 항변

이 원 보(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을 임금인상과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투쟁이 막바지를 맞고 있다. 지자체 선거 때문에 노동조합 측이 당분간 투쟁을 자제하고 있기는 하지만 임·단협교섭은 아직 절반도 타결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쟁점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는 양봉수와 박삼훈이라는 두 사람의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버린 참담한 현실을 겪었다.

양봉수 노동자는 현대자동차에서 해고된 노동조합 대의원으로서 5월 12일 공식적인 노조 회의에 참가하려다가 회사측이 폭력을 휘두르며 강압적으로 제지하자 이에 항의하여 자기 몸에 불을 질렀다. 전신 75%의 화상을 입고 32일간 병원에 있으면서 “하루 빨리 회복되어 현장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희망을 되뇌이다가 끝내 숨을 거두었지만 그 유골은 유가족의 뜻과 상관없이 경찰에 의해 강제로 옮겨지는 비운을 양봉수 노동자는 죽어서까지 겪어야 했다.

또 한 사람 대우조선의 박삼훈 노동자는 지난 6월 16일 다음과 같은 유서를 남기고 회사 안에서 자기 몸에 불을 붙인 후 건물 4층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놈의 세상 가진 자만이 판치는 세상
우리 근로자는 작은 월급으로 치솟는 물가를 따라가지도 못하고
노동자여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도 인간답게 살려고 살아가는 게 아닙니까.
특하면 집회 참석도 못하게 하고 우리 권리를 우리가 찾아야지 누가 찾습니까
노동자여 멍치면 살고 흠어지면 죽는다
을 임금 100% 쟁취하기 바랍니다.
사용자여 각성하라
앞서 간 노동열사 뒤를 따라 갑니다.

노동형제 여러분!

올해 목표를 기필코 승리하기 바랍니다.

이 두 사람의 노동자는 세상에 이름이 널리 알려진 운동가도 아니며 노동조합을 책임질 위치에 있는 상급 간부도 아니다. 한 사람은 공장의 한 부서 조합원을 대표하여 열심히 일했던 28살의 노조 대의원이며 또 한 사람은 가정을 가진 41세의 입사 15년째 된 평범한 현장 노동자의 한 사람이다. 이들은 25년 전 전태일열사가 서울 평화시장 봉제공장의 더할 데 없이 낮은 저임금과 참혹한 노동조건에 항의하여 분신한 노동자이었던 데 비해 1인당 국민소득 1만불 시대에 임금도 국내 최고 수준이라고 회사측이 선전해 마지않는 최대의 재벌기업 노동자들이다. 그런데 이들은 귀중한 생명을 내던졌다.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1970년 전태일 열사가 항의 분신으로 노동문제의 심각성을 경고한 이래 많은 노동자들이 노동 현실을 고발하면서 목숨을 내던졌고 이제는 노동조합운동도 큰 폭으로 진전된 상태에서 노동자들은 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는 것인가?

먼저 두 노동자가 자신의 목숨을 내던지게 된 배경과 경위를 보자. 현대자동차의 양봉수 노동자는 노동조합 대의원으로서 회사측이 노사간의 약속을 깨고 일방적으로 생산 속도를 올린 데 항의하여 작업을 거부했다가 지난 2월 20일 해고당했다. 그를 보호해야 할 노동조합으로부터는 본인의 잘못이라는 이유로 철저히 외면 당했고 법에 호소할 상태에서 어려운 해고자 생활을 이어오고 있었다. 그는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를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해서는 아니된다”는 법조항을 믿고 5월 12일 노조 현장공동소위원회 출범 식장에 참석하려 했으나 회사 경비원과 노무담당직원 20여 명이 출입을 막고 집단 폭행을 하자 이에 분개하여 시너를 은몸에 끼얹고 불을 붙였다. 이 사건이 발생하자 회사측은 책임이 없다고 발뺌을 했고 노동자들은 항의 파업에 돌입했다. 해고 당시 회사측을 두둔한 노조집행부는 현장의 파업이 집행부 전복을 위한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대우조선의 박삼훈 노동자는 일주일에 한두 명씩 죽어 나가는 힘들고 위험한 조선소 노동자로서 노조활동에 적극 참여해 왔었다. 그가 속한 노조는 4월 25일부터 회사측과 임금인상교섭을 벌여 왔으나, 회사측은 월급제 등 임금 및 직급체계개편이 교섭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교섭을 거부했다가, 5월 20일-6월 20일 간의 20차의 교섭 때까지 조정안조차 내지 않는 무성의한 교섭으로 일관하였다. 이 과정에서 5월 26일 노조 집회가 회사측 방해로 전체 조합원 8천 명 가운데 1천 명만이 참석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노조 위원장이 열흘간의 단식농성을 벌였으나, 6월 7일 열린 대의원 대회에서는 노동쟁의 발생이 부결되고, 6월 13일과 14일에 열린 조합원총회에서 참석

자 94.6%의 찬성으로 쟁의발생을 결의한 상태에 있었다.

이같은 사건의 경과에서 보듯이 회사측의 횡포는 극에 달하고 노동조합은 불법적인 행동을 감싸거나 무지막지한 회사의 힘에 밀리고 있는 상황 등 어느 한 군데 의지할 곳이 없는 상태에 두 노동자는 놓여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조건에서는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소박한 요구마저도 외면당하게 되고 빠른 시간 내에 사태가 해결될 전망을 보이지 않을 경우 심각한 위기감을 갖게 되고 끝내는 절망감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거대한 독점재벌 기업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상황은 두말할 것도 없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로지 이윤추적만을 목적으로 하는 자본의 속성에서 연유한다. 그러나 이러한 자본의 속성은 인간성 회복을 갈망하는 노동자들의 저항과 투쟁, 그리고 양자간의 대립 속에서 체제를 유지해야 하는 권력의 입장이 어떠한가에 따라 달리 표출된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노동정책은 독점자본의 횡포를 막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노동탄압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생산과 소유의 분리라는 구조적 모순 위에 성립한 자본주의체제에서 노사간의 대립과 분쟁은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 이 때문에 국가권력은 노사자치를 근간으로 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최소한의 조정적 역할을 통해 양자간에 힘의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 노사관계 정책의 원리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노사관계정책은 이러한 원리를 무시한 채 자본을 비호하고 노동측을 억압하는 방향으로만 치달아 왔으며 민주적 개혁을 표방하는 이른바 문민정부 아래에서도 달라진 것이 별로 없다. 오히려 그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95년에 들어 노동자에 대한 통제는 더욱 강화되었다. 정부는 집요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노-경총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일부 식자들을 동원하여 생산성임금제에 의한 임금가이드 라인을 설정하고 이 기준을 준수하도록 각 기업에 강요하고 나섰다. 물론 공기업에 대해서는 이마저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3%인상을 지시하였다. 그와 함께 노동부는 많은 사업장을 동원하여 이른바 '산업평화공동선언'이니 '노사화합 전진대회'니 하는 행사들을 벌이게 하여 노사안정이 정착되었다는 식으로 선전을 해댔다. 마침내 문민정권은 출범 이후 자랑스럽게 강조해 왔던 노사간 자율해결원칙을 완전히 파기하고 전면적인 노동탄압에 나선 것이다.

노사 자율해결 원칙의 포기는 국가 최고통치권자가 단체교섭도 미처 진행되지 않은 한국통신노동조합을 '체제전복 세력'으로 몰아붙여 엄단을 지시한데서 절정을 이루었다. 5월 19일 양봉수씨의 분신에 항의하기 위한 현대자동차 파업현장에 공권력을 투입하여 노동자들을 연행하고 구속했던 그 날 김영삼대통령은 한국통신 노조에 대하여

“국가전복 저의가 있지 않고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고 규정하면서 “노사분규 차원이 아니라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태이므로 엄중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한국통신 노조의 대화를 통한 사태 해결 제의를 거부하고 노조간부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발부와 검거 지시, 노조사무실 수색과 폐쇄를 강행했으며 종교계의 조정역할 제의도 일축한 채 노조간부들이 농성 중인 명동성당과 조계사에 경찰력을 투입하여 노동자들을 끌어내고 많은 노동조합간부들을 구속하거나 수배하였다.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이러한 정부의 반노동자적 공세는 ‘법대로’라는 현실 논리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즉 정부는 최근의 조치가 노동탄압이 아니라 ‘법치’의 근본을 명확히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강변하고 심지어는 군사정권 마저도 주저했던 명동성당과 조계사에 대한 경찰력 투입에 대해서도 ‘문민정부 앞에는 성역이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대부분의 언론매체들은 이 장단에 맞추어 노동자들을 몰아붙이거나 양비론으로 국민들의 판단을 현혹시키는 논리를 주저없이 펼쳤다. 그러나 이 나라 구성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노동자의 기본권이 대통령의 정치 스타일이나 집권당의 선거전략에 의해 좌우된다면 이는 결코 ‘법치’나 문민정치가 될 수 없을 것이다.

이치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노동탄압은 ‘국가발전과 경쟁력강화 및 사회안정을 위한 통치권의 행사’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고 노동자의 절박한 생활상의 요구나 합법적인 쟁의는 사회불안을 조장하는 행위이거나 시민을 불모로 하는 집단이기주의로 무참히 매도되고 있다. 정부, 자본, 일부 지식인에 의해 주장되고 있는 이러한 논리는 많은 일반 시민들의 사리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일부 노동조합들을 굴종적인 노사협조주의나 실리주의의 환상 속에 매몰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거센 탄압공세 아래 노동자상태는 날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으며 시시각각 조여 오는 경영합리화의 악령은 노동자들을 고용불안의 늪 속으로 밀어 넣고 있다. 국민소득 1만 달러의 시대에 노동자 대부분의 임금은 최저생계비를 밑돌고 이마저 소리 없이 뛰어오르는 현실물가와 급변하는 소비양식에 의해 잠식당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가계 파탄을 면하기 위해 온 가족이 직업전선에 뛰어들어 세계에서 가장 오랜 시간을 일을 해야 하며 산업재해와 직업병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열악한 작업환경에 건강과 생명을 걸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있는 것이다. 자본가들은 경영합리화를 내세워 노동자들의 목을 조르고 노동자간의 분열과 경쟁을 격화시킴으로써 노동자 권의 수호의 최후의 보루인 노동조합의 존립마저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자본간의 경쟁을 국가간의 경쟁으로 각색하고 있는 ‘세계화’가 진전되면 될수록 더욱 확대되고 또한 심화될 가능성을 충분히 갖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이 하루빨리 마련되지 않을 경우 노동자들의 희생은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

10 권두언

될 것이고, 노동조합의 입지는 그만큼 좁아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은 선진 공업국에서 이미 체험한 바와 같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의 상황을 타개하는 일은 1차적으로 노동조합운동이 떠맡아야 할 몫일 수밖에 없다. 노동조합은 자주성과 민주성의 원칙을 견지하면서 노동운동의 주체역량을 더욱 확대 강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으며 이를 위해 조직역량의 확대 개편과 산업별 조직형태로의 전환, 공동투쟁-통일투쟁의 강화와 올바른 투쟁전술의 운용, 과학적 운동이념의 정립과 정치적 역량강화 등 당면과제 해결을 위해 온 힘을 기울여야 할 상황에 있다.

그러나 이와 함께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문제는 권력과 자본측에 의해 유폐되고 있는 반노동자적 지배이데올로기의 확산을 여하히 차단하고 민주 노동운동의 정당성을 광범하게 인식시킬 것인가 하는 일이다. 여기서 우리는 산별노조로의 전환을 조속히 실현해 내지 않으면 안된다는 명제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 그러나 현재의 기업별 체계를 산별체제로 바꾸어 나가는 것은 희망만큼 간단한 일은 아니며 산별체계가 되면 한꺼번에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현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해내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상에서 제기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고민이 필요하지만 개별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운동 전체의 차원에서 활발한 연구와 논의과정을 거쳐 체계적이며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한 방안으로 새로운 교육방식의 개발과 교육활동의 확충, 사회개혁투쟁의 국민생활옹호투쟁으로의 승화 발전, 왜곡된 논리에 대한 구체적 대응, 노동조합의 정책대안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 전문역량의 결집과 적극적인 참여 등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양봉수씨와 박삼훈씨는 역사적으로 위대한 교훈을 남기기 위해 죽음의 결단을 내린 것이 아니다. 또한 한 시대 암울한 상황을 견디다 못해 죽음을 선택한 노동자로 쉬 잊혀질 수도 있다. 그러나 두 노동자는 오늘 노동운동이 처한 엄중한 상황을 죽음으로 일깨워 주었다. 아울러 노동자가 고귀한 생명을 버린 일을 일상적인 사건으로 덮어두려는 비정한 사회현실을 고발하면서 땀흘려 일하는 자가 억눌려 살아야 하는 모순의 타개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모두 스스로를 다잡으면서 옷깃을 여미고 명복을 빌자. □